

동북아역사 리포트

Vol. 49

NORTHEAST ASIAN HISTORY REPORT

2023년 10월 1일

관동대지진 100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호리야마 아키코_마이니치신문 전 서울지국장

1. 머리말
2. 2017년 이후 혼란 속에 치러진 추도식
3. 일본회기와 손을 잡은 소요카제
4. 중앙방재회의 보고서와 정부 견해의 간극
5. 「진재(震災) 사망자 조사표」를 비공개로 전환한 도쿄도
6. '민중 폭력'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내적 접근
7. 대중 영화, 논쟁에 불을 붙이다
8. 맺음말

관동대지진 100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호리야마 아키코(堀山明子)_마이니치신문 전 서울지국장

1. 머리말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한 세기가 흘렀다. 그사이 지진 이후 혼란 속에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희생된 학살 사건을 둘러싸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보수 단체와 행정 기관이 소장한 사건 관련 자료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보 단체가 대립각을 세웠고, 그 후 10년간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졌다.

특히 피해자 수가 이슈로 부상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와 도쿄도는 100년을 맞아 9월 1일 전후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통계 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추가 실태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 행정 기관에서는 보관 자료를 정리해 전모를 밝히려 애쓰기는커녕 논란을 방치하여 학살 사실 자체가 모호하다는 듯한 이미지를 만들었다. 행정 기관은 대놓고 '학살은 없었다'라고 공언하지는 않았지만, 논란을 핑계로 학살 희생자를 추모하지 않는 부작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사 봉인'의 새로운 꼼수가 아닐 수 없다.

관동대지진을 둘러싼 자료 검증과 연구는 10년마다 활기를 띠었다. 과거에는 학살을 선동한 경찰 등 기관의 가해 책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았다면, 90년이었던 2013년 이후부터는 일반 민중의 학살 가담 실태와 자경단 구성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경향으로 떠오르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보수 단체의 배외주의적 언행이 격렬해지면서 시민 사회에 증오범죄 재발에 대한 위기감이 퍼져 나간 것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본고에서는 관동대지진 100년을 맞아 학살 사건에 관한 정부와 시민 사회, 나아가 시민 단체 간의 역사 인식을 둘러싼 공방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민중 폭력'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 문제 제기의 의의를 고찰하겠다.

2. 2017년 이후 혼란 속에 치러진 추도식

관동대지진 100년 추모 행사 중에서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 도쿄도 위령당에서 거행된 추계 대법회는 정부와 도쿄도가 관여하는 공식 행사로, 현 천황의 남동생인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가 참석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방재 훈련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고, 대신 부지사가 추도문을 낭독했다. 재일 단체 중에서는 조총련과 민단이 따로따로 행사를 치렀다.

〈표 1〉 2023년 9월 1일 도쿄도 내에서 열린 주요 관동대지진 100년 위령 행사

시간	주최	장소	행사 명칭	주요 참가자
10:00	도쿄도위령협회	요코아미초 공원 내 도쿄도 위령당(스미다구)	추계 위령 대법회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도쿄도 부지사
11:00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도쿄국제포럼(긴자)	한국인 순난자 추념식	주일한국대사, 일한의원연맹 간부
11:00	일조협회(日朝協會) 등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요코아미초 공원 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시민 600명, 한국에서 방일한 유족
13:30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요코아미초 공원 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도쿄본부 위원장
16:30	소요카제	요코아미초 공원 내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주변	진실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제	소요카제 회원, 하쿠타 신당(가칭) 활동가

2023년 9월 1일 오전 11시, 일조협회(日朝協會)에 사무국을 둔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0년 희생자추도대회 실행위원회’가 위령당 부근에 건립된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추도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는 한국에서 일본을 찾은 유족 등 시민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에는 보수 단체 ‘소요카제(そよ風)’의 주최로 ‘진실의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위령제’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민족 차별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레이시스트(인종차별주의자)는 돌아가라.”라는 야유 세례를 퍼부으며, 소요카제는 추도비까지 채 닿지 못하고 주변에서 발언을 시작했다. 행사장은 시민들이 주고받는 비방이 난무하는 가운데 혼란에 휩싸였다.¹

1 「헤이트 단체와 반대로 공원 소란, 조선인 학살 추도비 앞(ヘイト団体と反対派で公園騒然、朝鮮人虐殺の追悼碑前)」, 『도쿄신문(東京新聞)』, 2023년 9월 1일 자, <https://www.tokyo-np.co.jp/article/274209>



관동대지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서 헌화하는 참석자들 © 마이니치신문 제공

추도식 행사장이 상호 비방으로 도배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부터다. 1973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가 건립되자 역대 도지사는 이듬해부터 추도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우익 성향의 고이케 도지사가 취임하고 나서는 취임 이듬해인 2017년부터 추도문 전달을 중단했다. 소요카제는 학살을 부정하는 집회를 근처에서 열기 시작했다. 이렇듯 도쿄도의 태도가 돌변한 것은 소요카제에 경도된 자민당 소속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추도비에 새겨진 ‘6,000명’이라는 사망자 수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 계기였다. 고이케 도지사는 “여러 설이 있다.”라며, 논란을 핑계로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

소요카제는 추도비 앞에서 ‘불령선인’ 등의 차별 표현을 공공연히 들먹이며 학살 사건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두고 도쿄도는 2019년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로 인정했면서도, 차별 표현 금지 등의 조건만 붙이고 행사 개최 행위는 금지하지 않았다.

반면 도쿄도는 학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려는 시민 단체에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도쿄도 인권부는 2022년 5월 관동대지진을 겪은 재일 조선인의 신산한 삶을 좇은 이야마 유키(飯山由貴)

감독의 영상 작품 『In-Mates』(2021)를 도쿄도 시설에서 상영하게 해달라는 시민 단체의 신청을 불허했다. 작품에 도노무라 마사루(外村大) 도쿄대학 교수가 “일본인이 조선인을 죽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장면이 담겼다는 이유였다. 이 장면을 꼬투리 잡아 고이케 도지사의 입장과 다르다며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후에 도쿄도는 민단에 “조선인 학살을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상영을 기획한 시민 단체에는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상영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² 학살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고이케 도지사의 역사 인식이 사회적 소수자를 옹호해야 마땅할 도쿄도 인권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3. 일본회의와 손을 잡은 소요카제

고이케 도지사도 인정하는 ‘소요카제’는 어떤 단체일까? 단체 홈페이지³ 블로그 게시글을 조사해 보니, 관동대지진 관련 글이 가장 많았고(504건), 군마현 현립공원 ‘군마의 숲(群馬の森)’에 세워진 ‘조선인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 철거를 요구하는 운동 관련 글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323건). 다른 과거사 문제 글은 기껏해야 50건 안팎인 것을 볼 때 조선인 희생자비 철거가 주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 단체는 ‘10대부터 80대까지 여성’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성은 일명 ‘소요카제 지원대’라는 준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23년 9월 23일 현재 여성 회원 수는 579명, 남성 지원대원은 316명이다. 군마현에 거주하는 회원은 6명뿐이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회원이 과반수를 차지한다.

2023년 7월 13일에는 회원 교류 이벤트의 일환으로 야스쿠니 신사 전몰자 위령제에 참여해 ‘소요카제’ 단체명으로 제등을 기증했다. 단체 공식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소요카제의 제등은 역사 수정주의 운동을 주도하는 ‘일본회의’와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제등이 걸린 곳에 함께 장식되었다.

2023년 9월 1일에 거행된 위령제의 동영상은 일본회의 행사 단상에 종종 강사로 오르는 작가 하쿠타 나오키(百田尚樹), 하쿠타와 정치 성향이 비슷한 언론인 아리모토 가오리(有本香), 아라카와구의 고사카 에이지(小坂英二) 구의원이 공유했다. 이 두 사람은 하쿠타가 10월에 창당할 ‘일본보수당’(속칭 하쿠타 신당)에 참여할 예정이다.

2 야스다 나쓰키(安田菜津紀), 「조선인 학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의미(朝鮮人虐殺 史実を認めない意味)」,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2023년 8월 29일 자, <https://mainichi.jp/premier/politics/articles/20230828/pol/00m/010/001000c>

3 소요카제 공식 홈페이지 <http://www.soyokaze2009.com/>

소요카제 위령제에 참석한 시민 중에는 ‘×6000 ○233’라 적힌 종이를 든 사람도 눈에 띄었다. 추도비에 새겨진 학살 희생자 수 6,000여 명에 대한 항의 표시다. 현장을 취재한 마이니치신문 기자는 233명은 가해자가 밝혀져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 수에 불과한데, 그조차 부정하는 참가자까지 있어 ‘위령제’는 허울일 뿐이라고 보도했다.⁴

4. 중앙방재회의 보고서와 정부 견해의 간극

지진 후 학살된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사법성과 군이 작성한 단편적인 보고만 존재할 뿐 전체를 아우르는 공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후에도 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지진 직후의 관청 기록을 사건별로 조사한 연구가 『1923 관동대지진 보고서 제2편』에 수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내각부 산하 자문 기관인 ‘중앙방재회의’가 방재 교훈을 목적으로 2009년에 펴낸 것으로, 역사학자 스즈키 준(鈴木淳) 도쿄대학 대학원 교수(보고서 작성 당시는 준교수)가 「살상 사건의 발생」 편을 맡아 집필했다.⁵

위 보고서에서 스즈키 교수는 유언비어로 인한 학살 사건의 희생자 수는 “지진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의 1%에서 수 퍼센트에 달해 도저히 인명 피해의 요인으로 경시할 수 없는 숫자다.”라고 결론 내렸다. 지진 사망자 수가 약 10만 5천 명으로 추산되므로, 천 명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1923년 12월 5일 자에서 조선인 희생자 수를 ‘6,661명’으로 보도하였다. 그런데 보수 단체가 희생자 수의 근거를 쟁점화하자 일본 언론이 중앙방재회의 보고서 숫자를 인용하는 횡수도 덩달아 늘고 있다.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 주최 단체도 지난 9월 1일 행사 안내문에 수천 명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했다.

또 스즈키 교수는 피해자 수를 확정하지 못한 이유로 군이 기록한 「간토 계엄 사령부 상보(関東戒嚴司令部詳報)」에 보고된 학살 사건이 사법성이 작성한 「형사 사범 등 조사서(刑事事犯等調査書)」에 기재되지 않은 점을 들고, “전모를 밝히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2건의 관청 기록에 적힌 학살 사건 희생자 수는 일본인, 중국인을 포함해 578명이라고 지적하고, 정리한 표를 함께 실었다.

4 「조선인 헤이트 집단의 집회 “사망자 233명” 사실 인정 발언 속속(朝鮮人ヘイト集團の集会「死者は233人」事実誤認発言が続々)」,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4면, 2023년 9월 11일 자

5 中央防災会議災害教訓の継承に関する専門調査会, 2009, 「第4章 混乱による被害の拡大 第2節 殺傷事件の発生」, 『1923 関東大震災報告書【第2編】』, https://www.bousai.go.jp/kyoiku/kyokun/kyoukunnokeishou/rep/1923_kanto_daishinsai_2/pdf/19_chap4-2.pdf

〈표 2〉 관청 기록에 의한 살상 사건 피해 사망자 수

종별	사범성 보고서 게재					계엄 업무 상보 게재			합계
	기소 사건			경찰	군 통첩 불명	군대		경찰·민간인 공동	
피해자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일본인	조선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도쿄	39	25	1	2		27	19	약 215	약 328
가나가와	2	4	2						8
지바	74	20			1	12	8		115
사이타마	94	1							95
군마	18	4							22
도치기	6	2							8
이바라키		1							1
후쿠시마		1							1
합계	233	58	3	2	1	39	27	약 215	약 578

주: 계엄 업무 상보에 게재된 경찰 민간인 공동 피해자 중 약 200명은 중국인이라는 설도 있음

보고서에는 전후 학살 사건의 연구 현황⁶과 자료편⁷도 수록되었는데, 스즈키 교수는 분석에 사용한 자료가 방위성 방위연구소 도서관, 도쿄도 공문서관, 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관 등의 소장 자료라고 밝혔다.

이렇게 보고서가 학살 희생자 수를 수천 명으로 추정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인정을 회피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8월 31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보고서는) 전문가가 집필한 것으로 정부의 견해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보고서에 공문서 소장 기관 목록이 존재하는데도 “정부 내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단언했다.

설사 각료가 참석했다 하더라도 자문 기관의 회의 보고는 정부에 대한 의견 제시일 뿐 정부 견해가 아니다. 그러나 그 의견 제시에는 정부가 그 내용을 토대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정부가 공공연히 무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같은 정부 대응에 스즈키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로서 조사, 연구한 성과를

6 앞의 책, 2009, 「コラム 8 殺傷事件の検証」, 前掲報告書, https://www.bousai.go.jp/kyoiku/kyokun/kyoukunnokeishou/rep/1923_kanto_daishinsai_2/pdf/22_column8.pdf

7 앞의 책, 2009, 「資料編」, 前掲報告書, https://www.bousai.go.jp/kyoiku/kyokun/kyoukunnokeishou/rep/1923_kanto_daishinsai_2/pdf/24_shiryo.pdf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그때그때 정부 견해와 달라도 간극을 보여주면 된다. 판단은 국민 몫이다. 그것이 민주 국가의 참다운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답했다.⁸ 보고서에 적은 학살 사건의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 발표를 재당한 것으로 ‘최소한’으로 잡았다.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모 규명이 과제임을 거듭 강조했다.

5. 「진재(震災) 사망자 조사표」를 비공개로 전환한 도쿄도

일본 각지에서는 학살 사건을 파헤치는 시민 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시 사건을 목격한 생존자의 증언 조사는 대지진 후 70년, 80년으로 확대되었고, 10년 주기마다 관련 서적이 다수 출판되었다. 그러나 90년 기념행사실행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한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센슈대학 교수는 실행위원회가 2014년 출간한 『관동대지진 기억의 계승(関東大震災 記憶の継承)』(일본경제평론사) 후기에서 70년 이후 20년간 주요 가입 단체의 면면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80년 이후 증언자가 타계하면서 영상 기록과 수기를 통한 공부 모임으로 성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역사 계승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진 재해 관련 그림과 사진을 연구하던 가나가와대학 연구팀은 2011년 12월, 도쿄도 위령당에 보관된 「진재 사망자 조사표」 일부의 열람 허가를 받아냈다. 관동대지진 사망자 수 10만 5천 명 중 도쿄도 사망자 수는 약 7만 명으로 추산한다. 지방에 소개한 도쿄도민을 제외한 사망자 조사표는 매장 허가 절차 혹은 하사 위문금 신청으로 도쿄도에 기록이 남아 있다. 요즘으로 치면 이재증명서에 해당한다. 위령당 전용 선반에 보관되어 있던 사망자 조사표는 대략 5만 장 이상에 육박하며, 이 중 4,356장에 대한 사진 촬영이 허가되었다. 사망자 조사표에는 이름, 주소, 본적지, 사망, 적요(사인 등)가 명기되어 있었고, 조선적(朝鮮籍)인 경우에는 한반도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연구팀 일원이었던 재해사 연구자 기타하라 이토코(北原糸子)는 2023년에 펴낸 저서⁹에서 조선적 사망자 83건을 분석했다. 이 중 본적지, 지진 발생 전 주소, 사망 장소가 기재된 건수는 53건이며, 사망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실종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학살 사건이 다수 발생한 가메이도(亀戸) 부근 주소에서 15명이 사망했는데, 진재 전 주소가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에 사망 장소와 기재 내용의

8 「정부는 조선인 학살 '기록 없다' 보고 정리한 학자는 '읽고 판단해라'(政府は朝鮮人虐殺「記録ない」 報告まとめた学者は「読んで判断を」)」, 『아사히신문(朝日新聞)』, 2023년 9월 18일 자,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R9K4T1YR9FUTIL01X.htm>

9 北原糸子, 2023, 『震災死亡者調査票』にみる朝鮮籍の死亡者, 『震災復興はどう引き継がれたか 関東大震災・昭和三陸津波・東日本大震災』, 藤原書店, pp.476~480

특징을 전체 조사표와 대조하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난 6월 7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타하라는 최근 사망자 조사표의 재공개를 요청했지만 “혐오 발언 같은 소란으로 10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¹⁰

약 5만 부의 사망자 조사표를 분석하면 조선인 학살 규명에 그치지 않고 피해 상황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도쿄도는 혐오 발언을 핑계로 연구 협력을 중단하고 말았다.

6. ‘민중 폭력’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내적 접근

역사를 봉인하고 학살을 조사하지 않는 행정 기관의 행위는 역사를 전승하려는 시민에게 역풍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권력의 부작용을 무턱대고 비판만 한다면 ‘권력=가해자, 민중=피해자’라는 맹목적 사고에 함몰되고 만다. 소요카제 같은 우익 단체의 주장이 권력의 압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성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라도, 100년 전 자경단 등이 자발적으로 학살에 가담한 ‘민중 폭력’의 구조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수년간 ‘민중 폭력’의 구조를 분석해 정의감이 강한 선량한 시민이 가해자로 변하는 요인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학살을 부추긴 권력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에서 민중의 책임으로 연구 방향을 돌릴 경우, 논리적으로 가해 책임 소재를 희석할 위험도 뒤따른다. 그러나 민중 폭력에 관한 연구는 문제의 바뀌치기가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계승하려는 연구자나 언론인이 나서서 제기하고 있다. 학살이 자행된 100년 전과 혐오 담론이 만연한 현재를 연결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잠재적인 편견을 포착하려는 내적 접근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민중 학살의 경우 관청 자료에서는 ‘자경단’을 행위 주체로 적시한 기술이 다수 발견된다. 그러나 중앙방재회의의 보고서 「살상 사건의 발생」 편에서 스즈키 교수는 “당시 무기를 가진 민간인 집단은 모조리 ‘자경단’으로 불리었다. 따라서 그 성격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라며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출판물 중에서는 프리랜서 작가 가토 나오키(加藤直樹)가 학살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저서 『구월, 도쿄의 거리에서: 1923년 간토대지진 대량학살의 잔향』(코로카라, 2015)이 과거와 현재의 현장을 연결하는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가토 나오키는 2022년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살 부정론이

¹⁰ 「관동대지진 100주년<3> 생존자와 사망자의 조사에 대해 기타하라 이토코 리쓰메이칸대학 객원연구원(関東大震災100年<3> 生存者と死亡者の調査について 北原糸子・立命館大学客員研究員)」, 일본기자클럽 YouTube 동영상, 2023년 6월 7일, <https://www.youtube.com/watch?v=QK00mD49fd8>

사회에 침투한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사실(史實)을 뒤틀어 희생자를 모독할 뿐만 아니라 ‘죽어도 짝 인간들이다’라는 차별 의식을 부추기고 재해 발생 시 유언비어 유포를 경계해야 한다는 당연한 교훈까지 부정함으로써 증오 범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라고 용납할 수 없는 이유를 역설했다.

학술 분야에서는 후지노 유코(藤野裕子) 와세다대학 교수가 펴낸 『민중 폭력—붕기·폭동·학살의 일본 근대(民衆暴力—揆・暴動・虐殺の日本近代)』(주교신서, 2020)가 새로운 시점을 제시했다. 이 책은 관동대지진 학살 사건도 사례 연구에 포함하고 있다. 후지노 교수는 민중 폭력의 배경에는 계급 사회 내부의 모순과 차별이 존재하며, 불만의 분출구가 권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권력에 맞서는 민중’과 ‘피차별자를 박해하는 민중’을 별개로 인식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이의를 제기하고 “권력에 반발하는 의식과 타민족 등을 차별하는 의식은 한 인간이나 사회 집단 속에 모순 없이 공존하다가 어찌 다 시작된 폭력을 계기로 죄다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라고 경종을 울렸다.

노동사 연구자 사토 후유키(佐藤冬樹)는 『관동대지진과 민중 범죄 입건된 114건의 기록에서(関東大震災と民衆犯罪 立件された一一四件の記録から)』(지쿠마선서, 2023)에서 자경단의 주축은 권력에 가까운 재향군인회였다는 선행 연구를 뒤집었다. 그는 60%가 소방 조직의 구성원이며,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리더였다고 규정했다. 또 지진 발생 전부터 외국인 노동자와의 사이에 노동 문제가 불거졌던 지역에서 주로 학살이 자행되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책 머리말에서 그는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나 민중 범죄의 실태 규명을 소홀히 한다면 학살 사건의 사실(史實)은 영원히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7. 대중 영화, 논쟁에 불을 붙이다

이러한 민중 폭력을 자문하는 문제의식은 영화계로도 퍼져 나갔다. 지난 2023년 9월 1일 개봉한 모리 다쓰야(森達也) 감독의 영화 <후쿠다무라 사건(福田村事件)>이 큰 주목을 받았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비를 조달한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오락적 요소를 가미해 만든 극영화이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정부 견해에 동조하는 듯한 보도를 내놓는 NHK조차 8월 30일 밤 방송된 간판 프로그램 <클로즈업 쟂다이>에 모리 감독 인터뷰를 30분에 걸쳐 내보냈다.¹¹

학살 사건이 벌어진 후쿠다무라는 현행 행정 구역상 지바현 노다시에 속한다. 관동대지진 발생 후인

11 『『福田村事件』森達也監督 100年前の“虐殺”が現代に問うもの』, NHK クロ現取材ノート, 2023년 8월 30일, <https://www.nhk.or.jp/minplus/0121/topic010.html>



영화 <후쿠다무라 사건>의 한 장면 © <후쿠다무라 사건>프로젝트 2023

9월 6일, 가가와현에서 온 보따리상 15명은 마을 주민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 ‘조선인이 아니냐’라며 취조당한 끝에 일본인이라고 항변했음에도 임산부를 포함한 9명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프리랜서 작가 쓰지노 야요이(辻野弥生)의 논픽션 『후쿠다무라 사건 관동대지진·알려지지 않은 비극(福田事件 関東大震災・知られざる悲劇)』(2013)으로도 출판되었다. 피해자가 가가와현에서 온 ‘피차별 부락’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지진 전부터 잠재하던 차별의식과 편견이 배외주의적 폭력을 낳았고, 그 화살은 조선인에 그치지 않고 결국 일본 국내 소수자에게로 향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가가와인권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후쿠다무라 사건은 ① 피차별 부락에 대한 차별, ② 보따리상이라는 직업에 대한 편견, ③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한 사건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영화에서는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라고 증언해주는 마을 주민이 나타나면서 폭행이 잠시 수그러드는 순간, 보따리상 리더가 “조선인이면 죽여도 되냐.”라고 맞받아치는 장면이 등장한다. 쓰지노의 책에는 없는 대사이다.

이와 관련해 모리 감독은 제작비를 조달하던 2022년 6월 8bitNews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인데도 살해당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끌어 갈 경우 조선인이면 죽여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싶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또 ‘가해자는 포악하지만 나는 다르다’라는 식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선을 긋기보다는 “선량한 시민이 가해자로 바뀌어 가는” 구조를 포착해 우리 내면의 차별의

식을 자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¹²

개봉을 앞두고 후쿠다무라 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아 스즈키 유(鈴木有) 노다 시장은 2023년 6월 20일 시의회에서 “피해를 당한 분들께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한다.”라며 조의를 표했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시가 피해자에게 조의를 표한 것이다. 마을에서 터부시되던 1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을 위한 교훈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관계 기관의 행동도 바뀔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져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8. 맺음말

관동대지진 100년을 맞이한 2023년에는 학살 사건을 비단 조선인에게 덮친 과거사 문제로 치부하지 않았다. 지금도 이어지는 일본 사회의 차별 구조가 파생한 문제로 포착하고, 내면에 존재하는 정의감조차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되돌아보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행정 기관에 의한 역사 봉인이 초래한 폐색감은 시민 사회에서 민중 폭력을 추궁하는 문제의식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역풍을 맞아 사건이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풍화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차별과 혐오를 없애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자와 언론인, 직접 활동에 참여한 청년 각자가 고민하는 가운데 사고의 한 물줄기가 창조되었다고 생각한다.

12 「유언비어는 사람을 차별하고 나아가 죽였다 ‘후쿠다무라 사건’을 스크린으로 옮긴 이유?(デマは人を差別し、そして殺した『福田村事件』映画化の理由は?)」, 『8bitnews』 YouTube 동영상, 2022년 6월 7일, <https://www.youtube.com/watch?v=Grdz5DmZl3c>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호리야마 아키코 |

1989년 대학생 시절 교환학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국 여성사를 연구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1991년 마이니치신문에 입사한 후 정치부, 외신부 등을 거쳐 주로 외교, 정치, 문화 교류 분야를 중심으로 보도해 왔다. 북일 교섭을 취재하기 위해서 평양을 세 번 방문했으며, 2004~2009년 서울 특파원, 2011~2015년 미국 LA 특파원으로 한국 사회와 해외 한인 사회를 취재했다. 2018년 4월 다시 서울지국장으로 부임했다가 2021년에 귀국했다. 현재는 주로 칼럼을 집필 중이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